

NEWS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이개호 “인구정책 성공 지자체에 인센티브 줘야”

尹,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
당사자 없이 결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결석 재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거동 불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료법상 구체적 질병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인치(법정으로의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 행사 시 사고 위험과 인권 침해 우려,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전달됐다.

박영수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거부했다”며 강제구인을 재차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치가 곤란한 경우 결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면 '李정부 8·15 특사'서 계속

앞서 박 전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적위 상심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을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아권에서는 홍문중·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정부는 또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할 방침이다.

영광군,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인구 유입 효과도
지원은 표창 등 불과...성과기반 재정·행정 지원 필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행정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표창 수준을 넘어,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1일 “지방정

부의 노력만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인구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전남 영광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자리를 지키며(2024년 1.72명), 같은 해 순유입 인구 1693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상



승과 인구 유입이라는 두 지표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둔 보기 드문 사례다.

영광군의 성과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본격화됐다. 군은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를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주거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병행한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이끌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졌다. 출산율 상승뿐 아니라 초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 지역 상권 회복, 장기 정주 인구 확대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정착 지원과 생활 인프라 개선이 결합된 종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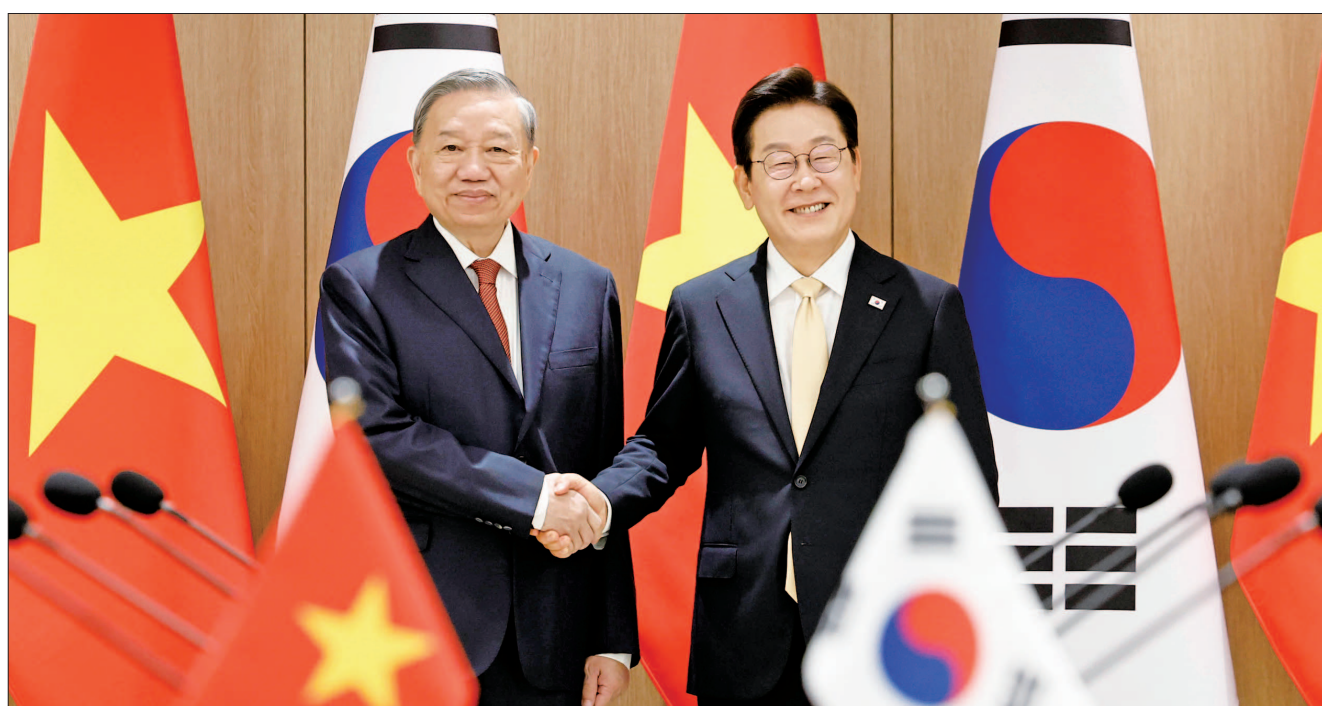
영광군 관계자는 “정책의 핵심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인구 유입은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대통령 표창 등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성과를 낸 지자체에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혜택을 부여해야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광군의 경험이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의 인구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성과기반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또 뽀 베트남 서기장과 확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또 뽀 베트남 당 서기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을·겨울 ‘숙박할인권’ 쏟아진다

236억 상당 80만장 배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
특별재난지역 5만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 기간에 236억원 상당의 숙박할인권 80만장을 배포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대

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를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문체부는 가을·겨울편 외에 특별재난지역편으로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숙박할인권 7만2000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이면 5만원, 7만원 미만이면 3만원의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민생 중심 감사체계 전환...행정문화 변화 신호탄

감사원 운영 개선 후속 조치...적극 행정·혁신 등 기대

전남도가 감사원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 맞춰 지적·처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감사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도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사후에 잘못을 찾아 징계·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혁신과

적극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 방향 전환 △적극행정 면책 강화 △소극행정 방지 △공직감찰 강화 등 4대 축이다. 먼저 감사 방향을 인허가 지연, 주민 불편사항 등 민생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도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나 적극적 판단으로 인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을 완화하고, 면책심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소극행정 방지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 복지부동 행태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신

고 제널을 추가로 개설하고, ‘소극행정 경고제’를 시행해 경미한 위반이라도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공직감찰은 횡령·배임, 갑질, 인권침해 등 공직 내 부패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감사가 단순한 ‘적발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지원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행정문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 시설원에 생선비 절감...냉방·차광시설 지원

전남도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고온에 민감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설원에 생선비 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과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

와 유리온실 등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로,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 설치, 차광·차열 자재와 차광막을 지원한다.

차광막과 차열제는 시설하우스에 유입되는 태양광을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폭염에 따른 작물 생육 장애, 품질 저하, 생선량 감소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온도를 관리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단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향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안전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원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